“차별·증오 금지 법제화 시급” 불교계 ‘촉각’

종평위 심포지엄 개최·마주협 국회의장 면담 등 지속 행보

19대 국회서 무산된 차별 및 증오방지 관련 법제도가 20대 국회서는 반드시 통과돼야한단 사회적 요청이 높다. 특히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창해 온 불교계는 최근 차별금지법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할 뿐 아니라, 이웃 종교계와 함께 국회에 정식 요청하는 등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는 12월 13일 ‘종교평화문화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차별 및 증오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증오차별방지법’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증오차별방지법’은 기존 ‘차별금지법’과 ‘증오범죄방지법’이 범죄 발생 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국가적 홍보 등 실시를 골자로 한다.

김 교수는 “차별이나 증오가 발생하기 전 예방차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 즉 성별·장애·나이·종교·성적지향 등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는 데 대해 “개별법제 형식을 취하면 차별 영역이나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자체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 반면, 처벌 규정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김 교수는 “이 법안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차별과 증오를 넘어 종교 평화의 시대로’를 주제로한 발제서 종교적 차별 행위 및 갈등을 막기 위한 법제로 △종교법인법 △차별금지법 등을 거론했다.



4대종단은 12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과 면담을 갖고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급 ‘한목소리’
범죄 사전 예방 필요성도 제기돼
이주민 인권 위한 인종차별금지도
정세균 “제도 정비, 조치 취할 것”

박 대표는 “거의 모든 선진 국가가 종교법인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개 분야 관련법(의료법·사립학교법·사회복지법)만 있고 종교법인법은 없다. 종교 간 첨예한 갈등과 정교야합 위험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종교법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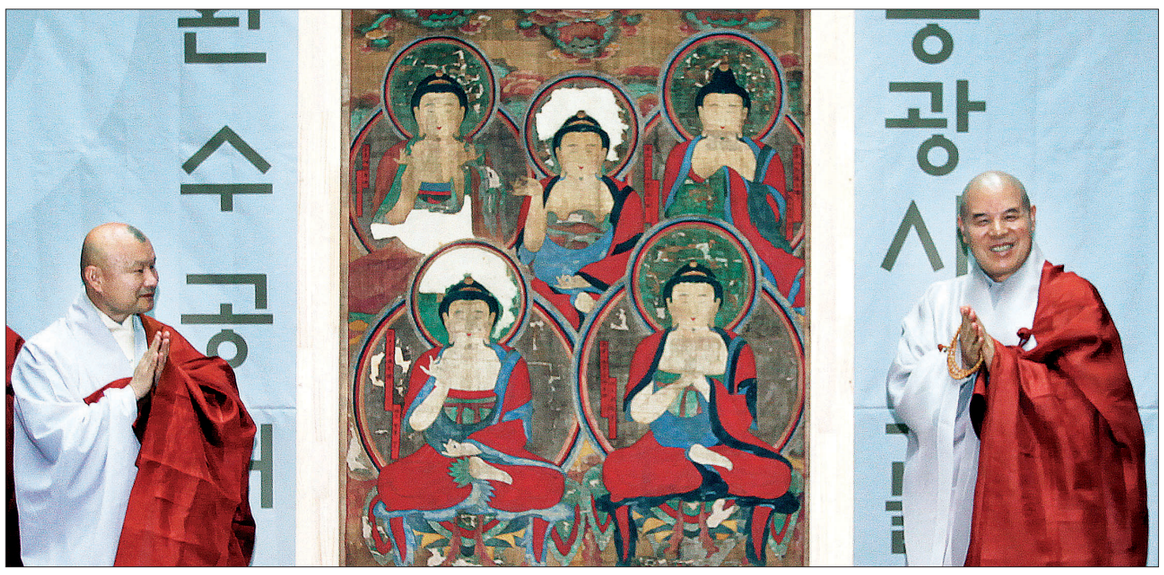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12월 18일 광화문 해치마당서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돌아가신 이주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위해 마련돼 1부 추모제 후 조계사로 행진, 이주노동자를 위한 저녁공양도 제공했다.

또한 사회노동위는 앞서 12월 14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원불교 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로 구성된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이하 4대종단)와 함께 12월 14일 국회 정론관서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위한 ‘이주민 200만 시대, 차별 없는 사회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대종단은 “이주민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제도 개선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포용력과 국격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며 “현재 UN은 우리 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종단은 기자회견 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인종차별 금지 법률 제정 △‘UN이주민권리협약’ 즉각 비준 △고용허가제 폐지 및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의장은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화서 제대로 된 나라란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오불도 환지본처에 감출 수 없는 미소가… 조계종은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송광사 오불도 환수공개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식에서 환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사진 왼쪽)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오른쪽)이 송광사 오불도를 가운데 두고 밝게 웃고 있다. **노덕현 기자**

선학원 성추행 혐의 스님 사의 표명

12월 15일 선학원 이사회는 수리 유보, 조사위 구성

최근 벌어진 선학원 최고위직 스님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 사건의 당사자 스님이 선학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12월 15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고위직 스님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선학원 이사회 측은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처리를 유보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사인 철오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북·지광 스님(이사), 원명·영은 스님(감사) 등 모두 5인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 관계자는 “성추행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며 내년 1~2월 초 열릴 예정인 차기 이사회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최고위직 스님은 지난 8월 초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스님에 대해 지난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교단자정센터는 12월 14일 성명을 통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직위를 감당할 도덕성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선학원 이사회는 마땅히 해임의결을 해 창립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신행혁신운동 밑그림, 결국 ‘붓다로 살자’

조계종 포교원, 연찬회서 슬로건·청규안 발표
주체·목표 불명확, 광범위하단 지적 뒤따라

수개월 장고 끝에 지난 8월 ‘신행혁신운동’이라는 포교종책을 내건 조계종 포교원이 ‘붓다로 살자’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도법 스님 주도로 2013년 출범한 ‘붓다로살자’와는 별개지만 기존 불교신행운동과의 차이가 없고, 주체·목표 등이 불명확하단 지적이 뒤따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신행혁신운동 및 불자상 정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주제로 제5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신행혁신운동의 이념을 ‘정법서 벗어난 신행을 혁신해 붓다의 삶을 따라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정리했다. 또 ‘붓다로 살자’는 슬로건과 함께 ‘삶을 지혜롭게·마음을 평화롭게·세상을 따뜻하게·지금 여기 깨어나 부처님처럼 살자’는 설명을 덧붙였다.

원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위기를 △열정 없는 신행 △공부하지 않는 불자 △평화와 수행의 결핍 △보시하지 않는 불자 등으로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포교원 산하 신행단체, 승가단체, 명상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신행혁신 주체로 삼고, 핵심신도와 잠정적 불자를 타깃으로 설정했다. 신행지침서·수행록·신행요강·각종 프로그램 등을 방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신행혁신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모호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토론자 명법 스님(은유와마음연구소장)은 “신행혁신운동의 목표와 방법, 주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기존의 수많은 불교운동과의 변별점도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법 스님은 또 “신행혁신 주체가 결국 기존 신행단체인데다가 그럼에도 불교계 위기가 찾아왔다는 점서 이를 타개할 역량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불자계층을 끌어들이는 데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스님은 이어 재가신도를 주체로 설정하지 않으면 신행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위로부터 아래로의 관변운동’이 아닌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매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희승 성철연구원 연구실장은 ‘붓다로 살자’ 신행혁신운동의 불자상과 청규안을 발표했다. 그는 신행혁신 육바라밀(정견·신심·수행·자비·청빈·화합공동체) 불자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인 △가족과 도반, 이웃 △자연 △수행생활 공동체 등의 청규안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매일 아침 한 수행법 생활화’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도반의 지적 받아고치기’ 등이 담겼다.

이에 토론자 심산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장)은 “붓다를 근본모델로 불자상을 설명하면서 육바라밀을 제시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내세웠다면 기존 육바라밀을 덕목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직업을 갖고 일상생활하는 불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생활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는 항목의 고민은 더 간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도수 교수(능인대학원대 불교학과)는 “운동은 단순하고 명료화해야 하며 실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청규안은 구체적이지만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주제를 3개 정도 정해 놓고 시기별로 실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자가 동참하지 않는 신행혁신운동은 결국 이론화되기 때문에 신자에게 맞는, 변화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호섭 기자**

